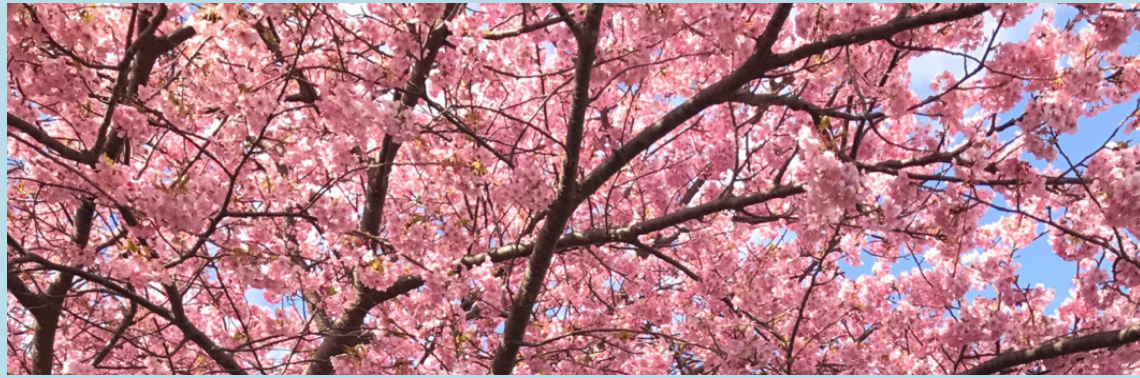




일본의 '긴급사태'와 '자숙' 매뉴얼

2020년 4월 7일, 아베 신조 수상이 일본의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일단 그 대상은 도쿄, 오사카를 포함한 7개 지역으로 한정했다. 집단감염의 폭증이 진행 또는 예견되는 대도시들이다. 이미 확진자의 80%가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긴급사태' 선언은 이들 지역으로부터 일본 열도 전체를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발령의 기한은 5월 6일이다. 세토기와(際)로 표현되는 중대 고비를 약 한달로 책정한 셈이다. 여기에는 '골든위크' 연휴기간 중 사람들의 발목을 묶어 둔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일본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림픽 특수라는 비전 대신 고용과 생활의 유지를 위해 무담보 대출과 현금지급을 골자로 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약속되었다. '긴급사태' 선언의 내용은 "국민 개개인의 접촉을 8할 정도 줄인다"는 슬로건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공권력을 통한 주권의 제한은 없으며, 평소와 같은 사회·경제생활은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재기와 격리는 필요없다는 말이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예상된 도시 봉쇄가 아닌 결국 '자숙(自)'의 강제로 드러났다. 새롭지 않으며 무엇보다 뒤늦은 감이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확연한 시간차가 느껴진다. 일본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장감은 벚꽃이 만개할 시기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연휴 직전인 3월 19일, 신형코로나감염 대책본부 전문가회의가 처음으로 감염자수의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래도 벚꽃놀이의 풍경은 지속되었다. 연휴 직후인 25일에는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도쿄도의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긴장감을 조성했다. 뒤이어 28일에는 아베 수상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불굴의 각오로 싸운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아베 수상의 결의가 아니라 국민 희극배우 시무라 켄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헤드라인 뉴스였다. 마침 다음날은 일본의 신학기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이었다.

오피스가와 상점가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코로나를 도대체 얼마나 무서워해야 하나? '긴급사태'를 선언하기 전까지, 아베 내각과 정치권은 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집단감염 차단에 실패한 이래, 아베 수상이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자숙'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자숙'은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의 언어가 되어왔고, 그 조차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3월 2일 초중고 일체 휴교를 강행했지만, 여론의 호된 비판 속에 24일 해제를 발표했다. 전문가회의가 감염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경고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기묘한 대응이었다. 일제휴교가 해지된 후에는 방학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각자도생 하듯이 개학 연기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학생들은 예기치 않은 자택학습을 강요당했다. 대학 또한 학사일정이 뒤엎겨 버렸고, 낯선 온라인 강의 실시 방법을 두고 난맥상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이 있기 전까지, 수상의 긴급기자회견에서는 긴급성이 전달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역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방역정책의 쟁점은 '봉쇄'와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한국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일본의 선택은 달랐다. 먼저 '봉쇄'와 관련해, 3월 5일 일본정부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출입국제한을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그 '저의'를 따졌지만, 일본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의 맥락에서 비판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한국을 특정해서 방역정책을 정치적으로 실시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일본에서도 강한 비판여론이 있었지만 그 대상은 출입국제한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이었다. 일제휴교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문가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방역과 의료전문가들은 국경봉쇄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그 실행이 국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시점까지 미루어진 점을 의아해했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예정된 시진핑의 방일을 고려한 아베 내각의 정치적 판단의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 '검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국과의 공통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PCR검사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또한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아베 수상이 관저주도로 감염자수를 은폐하고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이 해석에 근거하면 올림픽 연기가 확정된 이후부터는 검사가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과연 그런가? 일본전체가 위기를 분명히 인지한 지금도 검사 건수의 급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이 있기 전부터 검사의 확대와 관련한 시책들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의료계의 의견에 기초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문제제기로 '검사절차'의 간소화는 진행되었다. 하지만 '검사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감염자 중에 중증으로 발전하는 확진자가 소수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국민 다수가 면역력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감염예방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감염이 확대되는 속도이다.

전문가회의는 정치권이 발신하던 '자숙'의 요청을 3밀(密) 즉, 밀폐, 밀집, 밀접에 대한 회피로 매뉴얼화했다. 이 매뉴얼 또한 폭발적인 속도로 집단감염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후생성 산하에 검사확대가 아닌 집단감염 대책반이 별도로 꾸려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핵심목표는 '의료체제를 보존'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전략적 검사를 시행'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곧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할 만한 의료 및 행정시스템이 충분치 않다는 자기고백이기도 하다. 발표되는 감염자수는 병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전문가회의의 솔직한 공식입장이지만, '긴급사태'를 선언할 만큼 '무리해서 대처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실제 사망자의 수이다. 의료현장에서 이 수치를 축소보고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긴급사태' 중에도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 의료체계의 보존을 위한 '자숙'은 곧 검사의 요구를 '자숙'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과의 차이는 크다.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이 검사키트 100만개 무상제공 계획을 발표했다가 마스크의 무상제공으로 급하게 대체한 일이 있었다. 이 해프닝은 일본 국민들의 의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신과 불안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지만, 검사확대를 촉구하기 보다 대체로 '자숙'을 수용해 온 것이다. 국민들도 일본이 방역강국이 아님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잦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방재경험과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3.11 대진재 이후, 방사능 피폭에 대한 우려로 실시한 소아갑상선암의 지나친 검사확대가 비의학적인 오해와 억측, 그리고 불필요한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바 있었다. 이 사례는 의료계 종사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쉽게 잊혀지기 어려운 기억이다. 물론 집단의 기억 또는 사회적 유전자(Meme)는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의료체계 보존의 특별한 중요성은 방재와 관련한 과거의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고, 지금의 방역 관련 매뉴얼에도 반영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되돌아 보면 '긴급사태' 선언은 '자숙'의 요청을 '자숙'의 강화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보편적이지 않은 매뉴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인 매뉴얼을 미리 갖추고 있었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역에 대한 일본의 실력 또한 과거의 매뉴얼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본에 필요한 것은 익숙한 매뉴얼 수행능력이 아니라 이를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임기응변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무리를 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의료체계의 과부하 상황은 이미 도래하고 있다. 안이한 정치적 리더십과 경직된 사회경제 시스템은 낙관을 어렵게 하지만, 일본이 의료관계자들의 헌신과 시민의식마저 결여되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긴급사태' 선언 이전부터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인력과 체제를 신속하게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문제의 크루즈선이 정박했던 가나가와현이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시도했던 매뉴얼 갱신의 사례가 그러하다. 그 성패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역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는 인권과 연대를 손쉽게 주장하기 어렵다. 재해지역에 부흥기금을 보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안전보장문제라는 점에서 국경붕쇄 없는 민주적 대응 또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코로나 사태는 이처럼 보편적인 의제들을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응용문제로 만들어 놓았고, 이 때문에 각국의 해법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중일의 대응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만큼 앞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되돌아 볼 과제는 방역정책 만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서둘러서 일본의 코로나 사태를 평가하고자 할 필요는 없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긴급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아베 내각의 실정 또는 음모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손탁(忖度)', 즉, 일본의 의료계 전체가 아베 수상의 권력을 감지하고 알아서 충성할 만큼 어용화 되었다거나, 일본의 시민사회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할 만큼 신민화되었다는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다.



박정진

쓰다주쿠 대학(津田塾大学)
국제관계학과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